



오원석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환경담당이사

플라스틱포장 규제는 옳은 정책인가?

요즈음 플라스틱포장재 사용규제 분쟁으로 세상이 떠들석하다. 식품포장을 비롯하여 우리 생필품의 75%가 플라스틱포장으로 되어있으니,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시끄러울만도 하다.

포장이란 제품의 보존과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훼손을 막으면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수단이다.

포장을 사치로 보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관점에서는 포장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낭비의 개념으로 정의되었지만 지금 현대적 의미의 포장은 디자인면에서 상품의 품위를 높이고 주목을 끌게 함은 물론 설계에서는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상품의 자동화 생산라인과 유통과정, 위생, 보존 문제 등을 필수적이고 절대적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포장방법의 발전이 이루어져 제품의 보관, 운반의 편리성, 경제성, 보존성, 위생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종이포장, 유리포장, 알루미늄포장, 캔포장 등과 더불어 플라스틱 포장산업도 그 일환으로 발전되어 왔고, 현재 식품용기 포장재로 고추장, 된장, 김치, 국, 도시락, 가공식품, 농산품 등등 모든 제품에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날로 신장되어가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 추세이며 선진국일수록 플라스틱 포장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인류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필수품이 되어 있다.

인류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사람들은 물이나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보존을 게을리하듯이 플라스틱 포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그 뒷처리를 등한시하여 왔다. 선진각국은 회수, 재활용, 재생산 등 여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구, 노력없이 오직 매립에만 의존하고 회수·재활용·재생산 체계가 안되어 있다보니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공해 발생주범이 플라스틱 제조업자인양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보다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모두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니 이제는 뒷처리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 아닌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사용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자. 플라스틱은 생산과정에서는 어느 소재보다도 공해발생량이 적은 물질이다. 경제적 우월성은 물론이고 환경적 저공해성도 최고라고 볼 수 있다.

누구도 이 점을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만 사용과정에서는 용도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쓰고난 뒷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기에 회수재활용만 잘 되면 사용과정의 공해도 타소재와 비교하여 우월하다. 회수를 하지않고 아무데나 마구 버린다면 무슨 소재인들 공해가 아니겠

는가? 종이도 치워 거두지 않고 마구 버린다면 무서운 공해가 되고 말 것이다. '거두면 자원 버리면 공해'라는 표어는 모든 소재, 모든 제품에 똑같이 해당되는 멋진 표어이다.

모든 폐기물의 자원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1992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3년 7월 세부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생각은 옳았고 꾸준히 연구발전되어야 했으며,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 구국의 일념으로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및 보완·연구·노력도 없이 기본 법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아부쳐 합성수지재질 포장 중 계란, 과일팩, 컵라면용기, 가공식품용기, 생필품반침접시 등 일부 플라스틱포장에 대한 사용규제 정책을 추진중이다. 명분은 폐기물을 줄이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속셈은 다르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타소재로 대체사용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제목은 폐기물감량화이고 내용은 소재를 바꿔서 사용하자는 것이니 이 무슨 해괴한 논법인가?

대체 소재가 펄프물드라고 하고 규제대상품목 선정은 펄프물드로 가능한 품종만 골라서 선정했다니 그렇다면 환경부가 펄프물드 영업부로 전락했다단 말인가?

이는 특정업체 비호정책으로 오인되기 쉽고 때로는 환경을 빌미로 하는 이권사업집단의 이용물이 될 수도 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호응을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 환경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플라스틱보다 더 좋은 소재가 개발되면 정책지원없이도 자연대체됨이 순리다.

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방법은 발전을 거듭하여 첨단 산업화되었다. 원료 종류별로 선별하여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합성수지 생산초기부터 이용하였던 기초적 방법이고, 현재 우리나라도 총수집량의 50%가 처리되고 있다. 몇년 전에는 혼합된 폐플라스틱을 납사(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로 환원시키는 PLANT가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품내지분체연료화하여 제철산업, 시멘트산업, 기타산업연료(병커C유대체)로 무공해연료로 무진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폐플라스틱의 처리 고충은 말끔히 해결된 것이다. 원료별로 선별을 해야 재활용되었던 MATERIAL RECYCLE이나 초기설비투자가 대규모이어야 하는 CHEMICAL RECYCLE보다는 손쉽게 싼 비용으로 정유급 고급연료로 THERMAL RECYCLE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매력있는 처리 방법이다. 지금 우리는 이 방법을 도입하여 폐플라스틱의 전면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류의 대명제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자기 편한대로 이론정립하고 행동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환경관이 된다. 우리 속담에 "무면허 의사의 오진이 사람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는 지금 중소기업인 약 2천여 플라스틱 성형업체와 수십년간 종사해온 기술자 및 종사자와 가족 수만명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관련기계의 폐기 등으로 인한 약 일조원의 손실을 초래할 정책이 잘못된 환경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있으니...

환경문제의 해결은 우선 진정한 환경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념적 기준이 아닌 공식연구기관을 통한 전과정 평가(L·C·A)를 통하여 환경의 기준을 정하고, 국내산업기반과의 관계도 살피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하는 국제적 환경수준에 맞는 이른스러운 정책이라야 국민의 공감대와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진정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외국의 환경정책은 대내적으로는 환경문제를 중시하면서도 무역규제의 간접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 환경과 산업의 조화를 일거양득하는 정책인 반면 우리는 국제교역의 시비거리를 만들면서 외제수입을 도와주고 국내산업을 쇠퇴시키면서 환경문제는 별로 얻는 것이 없는 근시안적 정책이 많다. 전세계가 재활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라는 주제로 체력소모를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GR이 선진국의 무역전쟁무기로 발전하려는 이때에 철없이 자승자박을 하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영의 고차원적 이득과 기본법 취지에 맞게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으로 유도하는 장기안목의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 [K]